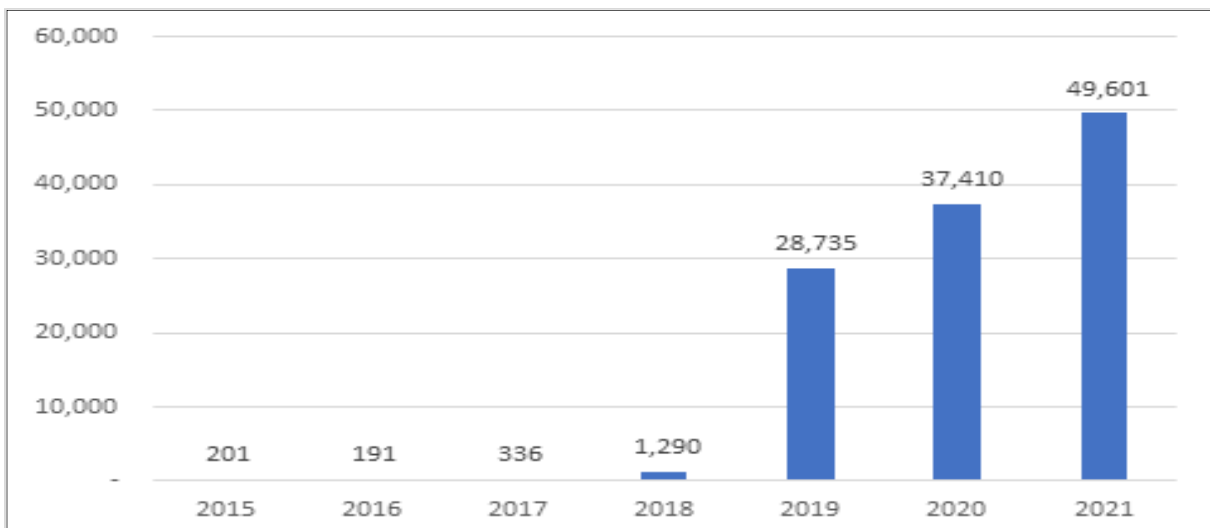


- 올 공시가 급증 관련 불만(의견 제출)이 49,601건으로 14년 만에 최대로 증가
 - 정부가 헛발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시킨 데다 시세 반영률까지 높이면서 올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07년(22.7%) 이후 최고(19.1%)로 상승한 탓
 - 특히 공시가 관련 불만은 문 정부 들어 급증하는 모습
 - 박근혜 정부 2013~2017년 중 의견 제출은 평균 약 250건
 - 문재인 정부 2018~2021년 중 약 2만 9천 건으로 박 정부 대비 약 120배
- 하루빨리 공시가격 제도 관련 투명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조세저항 불가피
 - 정부가 금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지만, 여전히 부실
 - 가격 산정의 핵심인 적정 시세와 개별 주택에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은 미공개
 - 재산세, 건보료, 재건축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'깜깜이 인상'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행정 불신과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임

문 정부 들어 급증하는 공시가 산정 관련 불만(의견 제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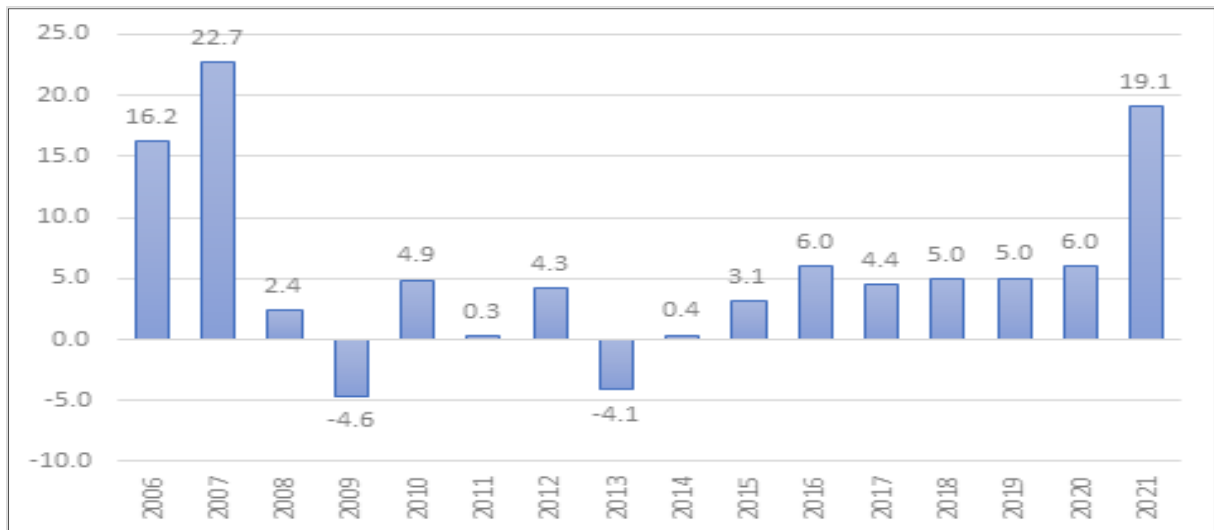
단위: 건 수



자료: 국토교통부, 매년 보도자료

올 공동주택 공시가격, 2007년(22.7%) 이후 최고(19.1%)로 상승

단위: 전년대비 %



자료: 국토교통부, 매년 보도자료